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1.10.(화) 제23-4호

◆ **[Focus]** 워싱턴무역관이 선정한 2023년 한-미 주요 통상 이슈 TOP 8

◆ **[What's News]**

- (의회) 하원 세입 위원장에 친트럼프 성향 제이슨 스미스 선출
- (무역통상) 북미 3국 9~10일 정상회담, 경제협력 심화, 투자 촉진 등 논의
- (규제) 美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,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검토 중
- (친환경) 바이든 행정부, 2050 운송 수단 탈탄소화 계획 청사진 발표
- (무역통상) USTR 한국·일본·APEC 담당 대표보 교체

◆ **[입법 동향]**

- (하원) 국세청(IRS) 예산 확대 무효화 법안 가결

◆ **[Top Headlines]**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통상) 워싱턴무역관이 선정한 2023년 한-미 주요 통상 이슈 TOP 8

미국 최대 친환경 산업 투자 법안, 인플레이션 감축법

- (동향) 미 재무부, 전기차 보조금 혜택 세부 규정 발표('22.12.29)
 - 리스와 렌트,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(단, 재판매 목적의 차량은 제외)
 - *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 수렴

◆ **[주목대상]** 전기차·태양광·풍력 등 친환경 산업 종사 기업

- (전기차) '23.3월 지침에 따라 공급망·생산·수출전략 변경 필요
- *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 약 80%(대한상의, '22.12월)
- (태양광·풍력) 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예정, 진출기회 확대

[체크포인트]

- ('23.3월) 배터리 핵심광물·부품 등 지침 공개
- ☞ 대중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광물 규제의 유연화 여부 주목 필요

□ 미국의 첨단 제조업 역량 강화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

- (동향) 바이든 정부, 산업 전반으로 ‘아메리카 퍼스트’ 확산
 - 인프라법, 반도체과학법,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입법에 더해 바이오기술제조 행정명령(NBBI) 서명, 미국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
 - * 바이든 “미국이 개발한 모든 것이 미국 내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”(22.9.12)
 - 동맹국가 간 기술, 인적 교류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

- ◆ [주목대상] 반도체, 배터리, 희토류,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관련 기업
 - 미국 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해 미국 진출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 강화 예정
 - 희토류,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, 공급선 다변화 검토 필요
- ◆ [체크포인트]
 - ('23.1분기)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(※EU법안)
 - ☞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적의 법안으로 미국 IRA와 유사한 전기차 보호무역주의 법안 실행 가능성 존재
 - (연내) REEShore Act of 2022 / Rare Earth Magnet Manufacturing Production Tax Credit Act of 2022의 재발의 여부
 - ☞ 양 법안 모두 117대 회기에서 상·하원 동시 발의된 법안으로 118대 회기에서 재발의 가능성 높음

□ 미국형 CBAM 제도의 한국 대미 수출 영향

- (동향) 바이든 대통령, 미국형 CBAM 제도의 신설 검토
 - 117대 회기에서 브라운-포트만법*, 청정경쟁법(Clean Competition Act),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(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) 등 발의
 - * Eliminating Global Market Distortions To Protect American Jobs Act
 - EU와 청정 철강 생산 증진을 위한 국제 협의체* 신설 제안(22.12.7)
 - *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

- ◆ [주목대상] 석유 정제품, 철강, 유기 화학 품목 대미 수출 기업
 - 청정경쟁법에서 미국형 CBAM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 25개 품목 중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
 - * 2021년 기준 우리 대미 수출의 9.6%가 CBAM 대상
 - 미국·EU가 탄소배출 가격을 한국(=톤당 21,000원)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 유력, 한국의 수출에 관세 적용 가능성이 큼
- ☑ [체크포인트]
 - ('23.10.31) 미-EU GSA 협정 체결 기한
 - ☞ 미-EU TTC를 통해 협상 예정
 - (연내) 브라운-포트만법 등 미국형 CBAM 관련 법안 118대 회기 내 재발의 가능성
 - ☞ 특히 브라운-포트만법의 경우 초당적으로 상·하원 동시 발의됨

□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

- (동향) 미국, 반도체법 내 가드레일 조항과 산업안보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대중 수출 통제('22.10.7)로 중국 반도체 굴기 차단
 - 중국,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해 WTO 제소('22.12.12)
 - 일본 니시무라 경산상, 첨단반도체 공급망 관련 미 상무부 지나 레이몬드 장관과 회의 진행('23.1.5)

◆ [주목대상] 반도체 산업 유관 기업

-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 바 있으나 10월 중 만료 예정
- 일본과 네덜란드가 대 중국 반도체 제재 참여 가능성이 높음
- 미 의존도가 높은 대만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WTO 제소에 동참한 상황

☑ [체크포인트]

- ('23.4.7) 중국 반도체 수출허가 임시 라이선스 만료
- ('23.10월) 한국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만료

□ 우려국 첨단기업 투자 규제의 한국의 기업활동에의 영향

- (동향) 국가핵심역량수호법(NCCDA) 관련 법령 입법 추진
 - 반도체, 배터리, 인공지능 등 국가핵심역량 관련 우려국 대상의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, 우려국의 경쟁력 및 공급망 탄력성 약화 추진
 - *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될 가능성 있음
 - 미-중 갈등 첨예화로 초당적 의회지지 속에 미국의 대중기술 규제 확대 강화 유력
 - *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조기 도입될 가능성 있음

◆ [주목대상] 반도체, 배터리, 주요 광물, 의약품, 인공지능, 양자컴퓨팅, 바이오 관련 기업

- 미국 자본이 투자된 한국기업의 투자도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

☑ [체크포인트]

- (연중) 대 중국 투자규제 입안 가능성
- (연중) 대 중국 수출통제 범위 확대(바이오, 친환경 산업 등) 가능성

□ 미-EU 공급망 재편 협력 추진

- (동향) '22년 3회 협상을 통해 의제 구체화, 상반기 내 다음 회의 개최 예정
 - 제3차 회의('22.12.5)에서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 기술·산업 분야 협력 강화와 중국의 비시장경제 관행 해결 등 우려국에 대한 공동 대응 확대에 대해 공동 성명 발표
 - 양국 간 협의된 디지털 무역, 기술 표준, 친환경 관련 의제가 IPEF에 채택 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높음

◆ [주목대상] 데이터, 반도체 관련 기업 등

- 미 국무부, 상무부, 무역대표부 등 주요 부처 참여, 우려국 수출 통제 등 미-EU간 주요 현안 논의의 장으로 격상
- 바이든 '대서양 횡단 데이터 정책 프레임 워크' 규칙 이행 행정명령 서명('22.10월)에 따른 EU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미국 내 확대 적용 가능성 유의

☑ [체크포인트]

- (상반기 예정) 제4차 미-EU 무역기술위원회 개최(스웨덴)
- (연내) 제5차 미-EU 무역기술위원회 개최(미국)

□ IPEF, 미국 중심의 신통상질서 출범

- (동향) 연내 14개 회원국간 협상으로 구체적 성과 도출 목표
 - 역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, 디지털 등 규범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
 - 공급망·디지털·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규범 및 협력방안 논의

◆ [주목대상] 산업 전반

☑ [체크포인트]

- ('23.2.8~10) IPEF 2차 협상 개최(인도)
- (연중) APEC 정상 회의(미국)
- ☞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 高

□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대 한국 수입규제

○ (동향) 반덤핑·상계관세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전망

- △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 권한 확대, △국경 간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, △환율 상계관세 규제 강화, △우회 덤핑 조사 절차 개정 등 포함
- 현재 중국 제품·서비스의 동남아를 경유한 우회 수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중
- 한국 대상 미국의 발효 중인 수입규제는 전체 46건('22.12.31 기준)

* 유형별 : 반덤핑 35건, 상계관세 9건, 세이프가드 2건 등

** 품목별 : 철강/금속(33건), 플라스틱/고무(4건), 섬유/의류(3건), 화학(2건) 전기전자(2건), 기계(1건), 기타(1건) 등

◆ [주목대상] 태양광, 철강 등

- (태양광) 미국 상무부, 중국 태양광 제품이 동남아 국가로 우회하여 미국의 반덤핑·상계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판정(단, '24.6월까지 관세 유예)

* 말레이시아 등 생산공장 설립 우리 기업에 영향 有

- (철강) 글로벌 철강·알루미늄 과잉생산 문제 외에 고탄소 배출 생산 규제 차원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

* 기후 위기를 국가안보 직결 사안으로 확장 해석하여 관세 정당화 검토


☑ [체크포인트]

- ('23.1.17) 대중 301조 관세 유지 공개의견 접수 마감
- ('23.1.30) 스페셜 301조 해외지재권 관련 공개의견 접수 마감
- ('23.3.15) 국제무역위원회(ITC), 232조/301조 산업 영향 평가 의회 제출 기한
- ('23.3.31) USTR 2023 국별진출장벽보고서(NTE) 제출 기한
- ('23.4.15) 미 재무부 상반기 주요국 환율 관행 보고서 제출
- ('23.9.30) 대중 301조 관세 면제(352개 품목) 기한 만료

□ **(의회) 하원 세입 위원장에 친트럼프 성향 제이슨 스미스 선출**

- (개요) 하원 운영위는 투표를 통해 새 세입 위원회(Ways and Means Committee) 위원장에 제이슨 스미스(Jason Smith) 의원 선출
 - 세입 위원회는 주로 세제, 무역, 복지지출 등 제반 입법 및 정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하원의 핵심 상임위원회로서 위상 보유
 - 당초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번 뷰캐넌(Vern Buchanan), 애드리안 스미스(Adrian Smith) 등 온건 친자유무역주의자 탈락
 - (반응) 공화당 강경파 득세 속 의회-정부 간 조세·통상 갈등 심화 전망
 - 언론은 스미스 위원장의 포퓰리스트, 친트럼프 성향에 주목하며 세제, 무역, 사회복지 정책 등에서 상원·정부와 잦은 마찰 예상
 - 스미스 위원장은 △미국 노동자 우선, △대중 강경책, △감세 확대 등 과거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조
- * 스미스 위원장 6대 경제 의제(성명서 1.9) : (1) 미국인을 위한 세금 정책 가동 (2) 국세청(IRS) 감독 강화 (3) 공급망 리쇼어링 (4)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 (5)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(6) 복지보다 고용 확대에 중점

< 제이슨 스미스 이력 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생년월일) 1940년 6월 16일○ (출생지)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○ (현직) 미주리주 8선거구 하원의원('13년 보궐선거로 최초 당선)○ (소속) 공화당 ○ (학력) 미주리대 경영학학사 / 오클라호마시티 대학 법대 졸업○ (특이사항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'20년 대선 부정 의혹 제기 126명 공화당 의원 중 하나- '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- 동성결혼, 이민 문호개방, 오바마케어 등 민주당 정책에 적극 반대
---	---

* 자료 : 블룸버그통신(1.9), 제이슨 스미스 의원실(1.9), 폴리τικο 프로(1.9)

□ [무역통상] 북미 3국 9~10일 정상회담 경제협력 심화 투자 촉진 등 논의

- (개요) 북미지역 3국 정상, 9~10일 멕시코에서 정상회담 실시
 - * North American Leaders' Summit (NALS)
 - '21년 11월 이후 최초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안보 문제를 비롯해 이민, 개발, 기후변화, 환경, 공급망 등 공통 과제 논의
 - 특히 미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 등 경제 파트너십 심화 확대에 집중
- (안전) 경제협력 심화, 투자 촉진, 혁신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협의
 - * 백악관 'FACT SHEET: Key Deliverable' 참조
 - (USMCA) 북미 경쟁력과 사회·경제 발전의 기반임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촉진,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전 논의
 - (공급망) 북미 전체 반도체 공급망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및 광물 자원 맵핑, 정보 공유 등 정부 및 산업계 고위 인사를 포함한 3자 간 반도체 포럼 조직 운영 계획('23년 상반기)
 - (기후위기) 메탄 배출량 감축, 식량 손실 및 폐기물 감축, 저탄소 모범 사례 공유, EV 충전기 설치 계획 개발, 북미 청정 수소 시장 개발 등
 - (기타) 이주민·난민, 마약 밀매, 국제 보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
- (반응) 폴리티코는 북미 3국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무역 분쟁 사안을 지목, 아직 분쟁 해결을 위한 돌파구는 열리지 않았다고 평가
 - (자동차) 1.12(목) 예정된 북미 자동차 원산지 규정 판결에 주목하며, 결과에 따라 USMCA의 신뢰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
 - (에너지) 멕시코의 에너지 산업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차별 문제
 - (유제품)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 쿼터 관련 분쟁
 - (옥수수) 멕시코의 미국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중단 방침에 따른 분쟁

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(1.10), 블룸버그(1.9), 폴리티코(1.9)

□ [규제] 美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,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검토 중

- (개요) 美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(CPSC :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)는 미국 내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.
 - 이는 근래 발표된 연구자료에서 가스레인지의 실내 공기오염 및 호흡기 질환(아동 천식 등) 유발 위험 제기*에 따른 조치
 - * 환경보호청 및 WTO 허용 기준 이상의 이산화질소, 일산화탄소 및 미세 먼지 배출로 호흡기·심혈관 질환과 암 유발 가능성 제기 (American Chemical Society, '22.1월)
 - CPSC는 조만간 공개의견을 수렴 후에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 명령 외에도 엄격한 배출 기준 수립을 검토할 예정
- (반응) 미국 가구 40%가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의 교체 필요성 증대
 - 美 의회는 CPSC에 가스레인지 안전기준, 안전장치 부착 및 유해 배출 경고(라벨링 등) 의무 등 규제 장치 마련 지시 ('22.12.21)
 - 주·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신규 건축에서 천연가스 사용 난방·조리를 금지하는 방식의 법안 채택 중 (뉴욕시, 캘리포니아주 등)
 - 지난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는 저소득 가구가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교체 시 최대 840달러 현금 지원 포함
- (함의) 규제 실현 시 미국 가스레인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 불가피
 - 미국 가전제조사협회는 조리 시 발생하는 실내 오염은 모든 조리 기구에서 공통 발생하며, 특정 기구 대상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반발
 - 미국 가스레인지 시장에서 선전 중인 우리 가전 업체에 적지 않은 피해 예상 (최악의 경우 판매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요구로 비용 상승)
 - * 미국 가스레인지(HS코드 7321.11) 수입 시장은 '21년 약 28억 달러로 추정, 우리 대미 수출은 약 1.2억 달러로 세계 4위 기록

* 자료 : 블룸버그 Gov(1.9), Cory Booker 상원의원실('22.12.21), 워싱턴무역관

□ [친환경] 바이든 행정부, 2050 운송 수단 탈탄소화 계획 청사진 발표

- (개요) 정부는 4개 연방 기관(에너지부, 교통부, 환경보호청, 주택도시개발부) 합동으로 '50년까지 운송 수단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청사진 발표
 - 환경보호청(EPA)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을 주장
 - * 美 온실가스 배출량 중 33%가 교통수단에서 발생한
- (세부 내용) 탈탄소화 계획은 '30년까지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와 '40년과 '50년까지 달성을 위한 중·장기 목표로 구분
 - '3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낮춰가며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, '30~'40년 사이 중점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저감
 -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편의성(convenient) 향상,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(efficient) 증대,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진행

<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별 연방정부 대응 방안>

구분	배출량 비중(%)	배출량 감축 목표
일반차량 (승용차)	49	· '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50% 무탄소 차량화 · '30년까지 50만 개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 설치 · '27년까지 연방정부 조달 차량 제로배출 달성
대형차량 (트럭, 버스)	21	· '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30% 무탄소 차량화 · '4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100% 무탄소 차량화 · '35년까지 연방정부 조달 차량 제로배출 달성
중장비	10	· 무탄소 차량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
철도	2	· 철도 이용 승객·화물량 증대 계획 지원
해양	3	· '30년까지 세계 10개 항구에 친환경 연료 급유 시설 마련 · 국내 친환경 연료 개발 사업 지원 · '50년까지 국제 화물 운송 제로배출 목표 달성 지원
항공	11	· 온실가스 배출 '30년까지 20%, '50년까지 100% 감축 · '30년까지 친환경 항공유 30억 갤런, '50년까지 350억 갤런 생산 능력 향상 지원
파이프라인	4	· '36년까지 1,000마일 연장의 파이프라인 보수·교체
합계	100	· '50년까지 현재 배출량에서 80% 이상 감소

- (반응)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, 일부 전문기관이 제시한 개선안 공유
 - (1) 향후 10년 배출량 감소 폭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사업 필요성 주장, (2) 친환경 항공 연료와 대형 트럭용 수소 전지에 관한 연방 연구 및 투자 확대 주장

* 자료 : 美 교통부 보도자료(1.10), 워싱턴포스트(1.10)

□ (무역통상) USTR 한국/일본/APEC 담당 대표보 교체

- '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담당했던 마이클 비먼(Michael Beeman) USTR 대표보(Assistant USTR for Japan, Korea, APEC)가 지난주 부로 퇴직
- 스콧 피탄(Scott Pietan) APEC 담당 부대표보가 대표보(대행)로 영전 예정
 - 피탄은 18년 정부 경력의 무역 정책통으로서,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이코노미스트, USTR 산업무역정책 국장, 국제조달정책 국장 등 역임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.9), 폴리티코프로(1.9), USAID 등

□ (H.R.23) 하원, 국세청(IRS) 예산 확대 무효화 법안 가결

- (개요) 하원 1호 추진 입법으로 '가계 및 소기업 납세자 보호 법안' 통과
 - * Family and Small Business Taxpayer Protection Act
 - 공화당은 하원 개원과 동시에 표결을 통해 221 : 210으로 법안 가결
 - 작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포함된 국세청(IRS) 증액 예산 800억 달러 중 약 716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
 -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가 IRA 예산 확대를 통해 납세자를 압박하고, 보수단체에 대한 세무감사 등 정치 보복이 예상된다고 비판
 - (영향) 법 통과 시 2032년까지 재정적자 1,144억 달러 증가 전망*
 - * 의회 예산처(Congressional Budget Office) 자료(1.9)
 - Americans for Prosperity, Americans for Tax Reform (ATR), National Taxpayers Union, the Taxpayer's Protection Alliance 등 단체 지지 표명
 - (전망)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최종 법안 통과 기대 난망
 - 만일 의회를 통과하더라도,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 현실성 낮음
- * 자료 : 블룸버그 Gov(1.9), 뉴욕타임즈(1.9) 등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Oil and Gas are back and booming (다시 돌아온 오일과 가스 호황기)</p> <p>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미국 경제회복 등으로 전통 에너지 산업 흑자 전환 및 주가 상승</p>
The Washington Post	<p>Republican-led House votes to investigate the investigators (공화당 주도 하원, 바이든 행정부 조사관 패널 투표 개시)</p> <p>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전 트럼프 대통령 법무부 수사를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이슈를 조사하는 조사관 패널 구성 표결을 실시</p>
New York Times	<p>The Three North American Leaders Will Speak After Meeting in Mexico (북미 정상 3인, 멕시코 회담 후 연설 예정)</p> <p>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에서 미국, 캐나다, 멕시코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공개 연설 예정</p>
Bloomberg	<p>Biggest Ever Bear-Market Bounces Create Unending Pain for Shorts (사상 최대 규모 약세장 반등)</p> <p>12일 공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세가 기대됨에 따라, 10월 이후 가장 큰 보폭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임</p>
USA Today	<p>Federal agency is considering a ban on gas stoves in the US, report says: 'Hidden hazard' (미국 연방,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고려)</p> <p>연방기관이 가스레인지 사용이 실내 공기오염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며,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짐</p>

* 미국 동부시간 1월 10일 18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1.10(화)	NFIB 중소기업 지수(NFIB small-business index)
1.10(화)	12월 소매 재고 검토(Wholesale inventories revision)
1.12(목)	소비자 물가지수(CPI Price Index)
1.13(금)	12월 수입물가 지수(Import Price Index)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자료발간)

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(US22-46)
- 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(US22-45)
-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- 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-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-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(US22-기획5)
-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-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- (인터뷰)

 <p>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/p> <p>PART.1</p> <p>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</p> <p>워싱턴 특파원 3인방이 짚어주는 2023 미국 경제전망!</p>	
 <p>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</p> <p>CES 총괄 부회장 John Kelly</p> <p>하늘을 나는 자동차에서 전기보트까지 미리보는 CES 2023!</p>	